

김형연 법제처장 초청, 제38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일시
2019년 12월 16일(월)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6일(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김형연 법제처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행정법제 혁신’을 주제로 제3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형연 처장은 발제에서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위한 법제처의 추진성과를 소개하고 행정법제 혁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행정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기본법 제정 기본방향을 공유했다. 행정기본법 제정 기대효과로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적극행정 구현 ▲규제혁신 촉진 ▲행정법 체계 효율화를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법제처에서 행정기본법 제정은 단순히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학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작업임을 그동안 강조해왔는데 이 자리가 참석한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재정부 재정법령 심포지엄 개최

일시
2019년 12월 18일(수)
장소
서울 상공회의소

한국법제연구원은 12월 18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재정 효율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재정법령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기획재정부 우윤철 제2차관, 정해방 前 건국대학교 교수 및 재정법제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국가재정법을 비롯한 재정법령의 주요한 제도와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제1세션에서는 ‘재정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주요국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비교 분석 ▲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재정여건의 정확한 판단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국가채무 개념과 출연, 보조금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옥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재훈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재정이 민간에 지원될 때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지원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재정법령의 발전을 위해 논의된 모든 내용들이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 2020년 시무식 개최

일시
2020년 1월 2일(목)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연구원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일(목)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0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시무식에서

연구위원 승진자 및 신입직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우수 직원 시상식이 있었다. 김계홍 원장은 신년인사에서 “매년 새해가 각별하게 다가오지만 올해는 연구원 개원 30주년을 맞는 해라 더욱 특별하다”며 “지난 취임사에서 기관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하나의 팀이 되자고 강조했는데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때다”라고 전했다. 이어 “원장과 직원구성 상관없이 조직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강건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시무식 종료 후 김계홍 원장과 주요 간부들은 참석한 직원 모두와 악수를 하고 새해 덕담 인사를 나눴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방안 연구” 관련 하위법령제정안 설명회 개최

일시
2020년 2월 12일(수)
장소
엘타워 골드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엘타워 골드홀에서 국토교통부 수탁과제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제정안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 안전구간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관리, 각종 특례 부여 절차 및 관련기관·사업자 지원조항 등을 설명했다.